

기본소득 찬반 논쟁과 자원 문제

- 『기본소득과 좌파』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서평을 중심으로

안현호

대구대학교

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기본소득이 정책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면 할수록 기본소득이 정책 논쟁의 중심에 놓이는 역설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번역된 두 권의 저서 『기본소득과 좌파』(필리프 판 파레이스 편, 안효상 역, 박종철출판사, 2020),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제프 크로커, 유승경 역,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21)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고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기본소득과 좌파』는 유럽에서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엮은 것이다. 서구에서 좌파란 의회에서 급진파가 왼쪽에 위치한 것에서 유래하여 진보적 정치세력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데, 파레이스의 거친 분류에 의하면 노동을 중심에 두는 노동주의 좌파와 자유를 중심에 두는 자유시장주의 좌파로 대별할 수 있다(11~12쪽). 따라서 기본소득과 좌파는 좌파 내의 두 세력 간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다.

노동주의 좌파의 기본소득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에게도 지원하는 보편성에 대한 비판

둘째,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지원하는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

셋째,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비판

넷째, 기본소득 재원 규모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비판

이러한 비판들을 열거하자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비판들은 위 논점을 둘러싸고 확대재생산되는 것 같다.

첫째 논점에 대해서는 소득을 구분하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에게 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좋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체에게 주는 더 큰 금액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권리의 보편성에 근거한 보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보편성에 근거해서 얼마의 기본소득 금액을 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자산심사의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없는 자산심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한다(28쪽).

둘째의 논점은 노동주의 좌파에게 핵심 쟁점이다. 일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노동주의 좌파의 핵심 아젠다는 일의 가치대로 댓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르주아 경제학과 다른 점은 일의 가치를 누가 생산하는가이다. 노동주의 좌파에 의하면 노동가치는 노동에서 출현하므로 노동에 대해 지불되어야 한다. 노동주의 좌파는 이 논리에 의거해서 일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기본소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나태해지고, 다시는 노동현장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셋째 쟁점은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불방식이 소득 하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동일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넓게 지불하는 것보다 소득 하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단순한 산수를 들이댄다.

넷째 쟁점은 기본소득을 의미있게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막대하며 이 재원이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동원하기에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여기서 요약한 비판들은 기본소득의 기본 생각에 대한 것과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점이 서로 뒤섞여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만, 기본소득을 반대할 경우 적용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이 점에서는 원칙과 실현이 서로 엮인 것은 틀림없지만, 검토와 숙고에서는 양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굳이 『기본소득과 좌파』에 등장하는 논점은 좌파만의 논점이 아니라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논점 전체를 아우른다고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좌파 내의 기본소득 논쟁이라면 이 중에서 둘째의 쟁점이 핵심이 될 법하다. 여기에도 1) 노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차이부터 2) 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형태가 초래하는 생산과정의 효과 및 3) 일과 분리된 소득이 주어질 때의 노동자의 반응 등 다양한 차원이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노동주의 좌파의 경우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노동수요가 급감할 것



이라는 예측을 동의하지 않고 나아가서 일과 분리된 소득은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주장으로 일관된 반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세 층위의 각 영역에서 진입한다. 노동할 권리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가져오는 권리 - 즉 여기서는 노동이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다 - 를 강조해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이 결국 노동수요를 급감시키고 프레카리아트를 양산할 것이므로 이들의 불안정한 소득구조를 변화할 필요성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도 있으며, 기본소득은 일의 유무와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기도 한다. 둘째 논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반대자보다 지지자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정책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리적 교조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는다.

첫째, 셋째, 넷째 쟁점은 대체로 실현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셋째와 넷째 쟁점은 기본소득의 수준을 중심으로 서로 얽혀 있다. 만약 기본소득의 지불금액과 총 재원이 충분히 크다면 셋째 쟁점은 핵심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쟁점은 주어진 재원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단순히 이론적 쟁점이 아니라, 현실의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단계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세 번째 비판에 불가피하게 직면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동일한 재원으로 100명 중 하위 20명에게 500만 원씩 줄 것인가, 아니면 100명 전원에게 100만 원씩 줄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된다. 여기에서 다양한 선택지와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독자들도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런데 충분한 재원을 전제한다면 이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하위 10명에게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1억 원을 조성해서 전원에게 100만 원씩 줄 수 있다면 셋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넷째의 쟁점으로 이어진다. 이 넷째의 쟁점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일반적 대답은 세금이다. 세금을 통한 자원 확보는 총생산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치적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원에 대한 논의 - 누진소득세,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 토지세, 탄소세 등 - 가 제기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세금 문제는 국회 통과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국채발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이자 지불 비용 외에도 원금 상환 의무가 주어진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다. 도대체 국채는 어떻게 발행되는가?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여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신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자도 낮고 장기간의 회수 기간을 갖는다. 정부가 여러 가지 필요로 국채를 발행

할 때 시급성이 있으므로 시중은행에 강제로 매각도 되고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구입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장기침체를 겪는 일본은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일본 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여 정부지출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2001년에 시작해서 2008년이 되면 경기침체를 겪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했다. 이 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통제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달리 부실에 시달리는 각종 채권을 중앙은행을 통해 직접 매입해주었다.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은 부실 채권에 대해서 시행될 때는 결국 부도 위기에 놓인 채권자들 - 부자들 - 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대선을 통해서 새로이 등장한 화폐이론^{현대화폐이론, Modern Money Theory}은 화폐의 본질 자체를 문제 삼는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이 이론적 맥락 속에서 화폐의 본질을 주권화폐로 보고, 정부가 통화량을 관리할 뿐 아니라 정부가 화폐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창출된 화폐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폐에 대한 시각은 이른바 ‘현대화폐이론’과 같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주권화폐』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현대 사회의 본질을 소비자 지출에서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근로소득의 비중에서 찾는다. 연금, 복지 혜택, 배당 등은 일하고 받는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비근로소득인데 근로대중 자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성에서 경향적으로 근로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라고 보면, 노동의 결과로 받는 소득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모두 소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회가 굴러가려면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총수요가 창출되어야 하므로 기본소득이라는 일과 분리된 새로운 소득형태가 필요하다.

저자에 의하면 과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 재원은 세수중립성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조세 저항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총생산을 흡수할 수 있는 총수요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97쪽). 따라서 주권화폐라는 제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체계적인 과소소비 경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권화폐의 발행에는 제한이 있다. 현대화폐이론에 의하면 총생산을 흡수할 만큼 발행하는 것이 제한이다. 만약 그 이상 발행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쟁점은 이론적 쟁점과 현실적 쟁점이 모두 있다. 이 쟁점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의 실행 과정의 어려움이 기본소득 자체의 부정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더라도 그 현실화는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발휘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열린 토론은 매우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논쟁이 심화될수록 기본소득의 현실화는 좀 더 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